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2. 1.(수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4인)
4. 불참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(1인)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6 의결사항

가. 「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」 및 「통화권별 행정구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05-034)

-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역번호 부여 및 통합 창원시의 기존 통화권 통합 등을 위한 관련 고시(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, 통화권별 행정구역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세종시 지역번호 (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7조 제3항 표, 별표1)

- 주민의 지리적 정서(충청권)에 부합되는 '4x' 계열을 부여하되, 지역번호의 순차적 부여 원칙(효율적 사용)에 따라 '44' 부여 (충남41, 대전42, 충북43)

② 통화권 조정(통화권별 행정구역)

- (세종시) 세종시내 3개(충남 연기, 공주 일부, 천안 일부) 통화권을 시내전화 사업자(KT, SKB, LGU+)와의 협의를 통해 '세종' 통화권으로 통합
- (통합 창원시) 마산(마산·창원)통화권과 진해 통화권을 '창원' 통화권으로 통합

③ 기타 일부 조문 현행화 (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6조 제3항)

- 이미 사라진 통신역무 구분을 전제로 규정된 일부 조항 정리
 - ※ "유선전화 지역번호를 '역무의 종류에 따라'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"는 규정(고시 제6조 제3항)을 '이용자 편익을 위해'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변경

○ 향후 일정

- 2월중 : 고시 개정 및 관보게재
- ~'12.6.30 :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통신사업자의 지역번호 홍보
- '12.7.1~12.31 : 사업자는 기존 지역번호(41, 43)로 발신한 경우 44로 연결해주는 전화번호연결 서비스 실시

나. 20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(안)에 관한 건 - (2012-05-035)

- 정한근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기술개발·표준화, 인력양성 등 2012년도 방통위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※ '11년(1,984억원) 대비 4.4% 증액된 2,072억원 규모(신규 598억원)

○ 주요 내용

① 기술개발 부문

㉠ 미래 스마트 신산업에 대한 R&D 강화

- 길목특허 선점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선도
 - 현재보다 빠르고 간섭에 강한 차세대 Wi-Fi, B4G 등 차세대이동통신(4G) 이후의 신개념 통신기술 개발
 -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대용량 콘텐츠의 분산 처리를 위한 스마트 노드 및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광전송장비 핵심기술 개발
-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능동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기술 개발
 - 광고, 추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디지털 사이니지, 대규모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처리·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
 - 실감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음성·동작 인식 등 Rich UI/UX 기술 개발
- ICT 역기능 방지,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
 - 스마트폰의 철저한 보안,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USIM에 탑재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모듈 개발
 - 3D 콘텐츠의 시청 안전성 확보, 항법신호(GPS) 보호, 재난방송 기반기술 개발

㉡ 방송통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

- 중소기업(대학 포함)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창의형 (Imagination Breakthrough) R&D 지원
 - 모바일 서비스, 전파기반 분야의 소액과제(1~5억원)에 대하여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지 않는 자유공모형 과제 지원
 - ※ 자유공모 지원 예산 : 모바일 서비스(25억원), 전파기반 분야(17억원)
- 방송통신 생태계 변화에 따라 중소 벤처의 지속적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화 R&D 추진
 - 클라우드 IDC 스위치, 초소형 기지국 등의 기반 기술 개발

② 표준화 부문

㉠ 유망 방송통신서비스 표준 개발

- 원천 특허 선점이 가능한 차세대이동통신(B4G/5G) 등 전략 표준을 개발하고, 녹색 기술의 선점을 위해 「그린터치컨소시엄」에 적극 참여
- 의료, 자동차 등 타 산업에 다양한 응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형 사물지능통신(M2M) 서비스 표준 개발

㉡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 개발

- 모바일 앱 장애인 접근성 향상, 시각장애인 관련 표준 등 사회 약자의 정보 격차해소와 연계된 표준을 발굴하고 국내외 표준화 추진

③ 인력양성 부문

-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 고급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정책연구센터를 지원(5개 센터 운영)하고, 설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 지원

④ 기반조성 부문

- IPv6, 미래인터넷 등 인터넷서비스의 시험·검증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, 국제 연구망(TEIN) 등 연구인프라 지원
- 스마트폰,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발굴 지원 및 관련 표준 규격 마련 지원
- NFC, Wi-Fi 등 근거리 통신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 테스트베드를 신규로 구축하고, 애로기술 파악·기술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
- 특허 등 기술정보 DB 구축을 통한 지적재산권 관리 및 개발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을 위한 성과 확산 체계 확립

○ 향후 계획

- 방통위-전담기관* 위탁협약 체결 : '12. 2월
- * 기술개발·인력양성·기반조성 : KCA, 표준화 : TTA
-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신규 과제 공고 및 접수 : '12. 2~3월
- 수행기관 선정 : '12. 3월

7] 보고사항

가.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구성·운영 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○ '12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현황 점검을 위한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점검단 구성·운영계획(안)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(직무)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의 성공적 종료를 위해 '12년도 디지털 전환 계획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

※ 기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, 추진점검단은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점검으로 차별화

② (점검 사항)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의 정부 지원 실적, 대국민 홍보 실적, 수신환경 개선 실적 등 '12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과제

< 주요 점검 사항 >

직접수신가구 지원 실적	디지털방송 전환 홍보 실적	수신환경 개선 실적
·저소득층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실적	·자막고지방송 실적	·아파트 공시청 설비 개·보수 실적
·일반가구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실적	·TV광고, 특집프로그램 등 방송 실적	·방송보조국·소출력증계기 구축 실적
·노인·장애인가구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실적	·面對面 홍보 실적	·사회복지시설 디지털방송 전환 실적
	·디지털방송 콜센터 운영현황	

③ (구성) 디지털방송 전환 예산사업 수행기관, 방송사업자, 시민단체 등 총 13인

※ 디지털방송 전환 예산사업 수행기관 : 한국전파진흥협회(RAPA)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KCA),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(DTV Korea)

- 점검단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지정

④ (운영) 월 1회 정기회의 개최(필요시 수시 개최)

- 예산사업 수행기관의 책임과 적극적 사업수행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RAPA, DTV Korea를 책임·보고 기관으로 지정

주요 점검 사항	책임·보고 기관
△ 직접수신가구 지원 예산사업	한국전파진흥협회(RAPA)
△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 예산사업	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(DTV Korea)

※ RAPA, DTV Korea에서 보고하는 사항은 추진점검단 회의 전 방통위와 사전 협의

- 자막고지방송, 수신환경 개선 등은 각 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실적을 제출받아 방통위가 총괄 보고

- 집행실적 점검 결과 파악한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
-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이 종료되는 '12년 말까지 운영(필요시 연장 운영)

나.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접수함

※ 수정내용 : 본문 내용 중 “3. 기타사항”을 “3. 보완사항”으로 수정하기로 함

○ 주요내용

1. 보고사유 : 생략

2. 고시 주요내용

①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(별표)

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(지상파DMB) : 유예 → 0% 고시

-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적자가 지속, 분담금 면제방법을 0%로 통일

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(IPTV) : 0% 고시

- 영업이익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, 법정면제 만료 후 추가 유예사례(위성) 고려

※ 일반위성·위성DMB는 분담금을 3년간 법정 면제한 후에 일반위성은 3년간 추가 유예하였고, 위성DMB는 '09년부터 현재까지 징수율 0%를 적용 중

㉢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: 0% 고시

- 신규 방송서비스 사업자로 사업초기 영업손실이 예상되고, 최초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한 유예사례(SO, 위성, 지상파DMB, IPTV) 고려

※ SO는 사업초기 분담금을 2년간 유예하였고, IPTV는 최근 3년간('09년~'11년) 법정 면제하였으며, 지상파DMB는 '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 유예 중

㉣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: 0% 고시

- 기존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방송사업부문은 당기순손실이 추정되며, 신규 사업자는 사업초기 영업손실이 예상

- 최초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한 유예사례(SO, 위성, 지상파DMB, IPTV) 고려

② 지상파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 신설(안 부칙 제2조)

- (분담금 분납)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3년까지 분담금이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1/2씩 2회에 걸쳐 분납 가능
- (납부시기) 납부 고지 후 1회차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1개월 이내에, 2회차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납부

③ 적용시점(안 부칙 제1조) 및 재검토 기한 1년 연장(안 본칙 제9조)

- (분담금 적용시점)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2년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, 그 외 사업자는 2011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, 방송광고 매출액,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부터 분담금 산정에 적용
- (재검토 기한)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, 부칙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본칙에 규정(법제처 일몰조항 규정방법)

3. 보완사항

- 향후 방송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따른 과도한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기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시 감안하여 반영 추진
-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사업자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'12년 중 마련

4. 향후 계획

- 고시안 행정예고 : '12. 2월 초순
-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: '12. 2월 중순
-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: '12. 3월 하순

다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방송사업자의 소유·경영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① 공청회 결과, 폐지 또는 완화에 이견이 없었던 규제를 개선함(5건)

< 개정내용 >

- 특정 방송사업자(KBS, EBS, MBC, PP 제외)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%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(제4조제5항제1호)

-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%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(제4조제5항제2호)
- SO·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수의 1/5을,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/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(제4조제6항제2·3호)
-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사업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(제4조제7항제2호)
- MSO는 전체 SO가입가구 수의 1/3, 전체 방송구역의 1/3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중 방송구역 제한은 삭제하고, 가입가구 수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1/3제한으로 변경함(제4조제7항제3·4호)

< 개정사유 >

- 공청회 결과 이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점유율·가입가구 수 규제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므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임

< 규제 폐지 시 제도적 보완 수단 >

구 분	제도적 보완 수단
전체매출액의 33% 제한	▪시청점유율 /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/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
지상파→위성 33% 제한	▪시청점유율 /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
SO위성↔PP 경영 제한	▪시청점유율 /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/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
지상파DMB 1개 경영	▪시청점유율 /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
MSO 방송구역 제한	▪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/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

※ 시청점유율 제한 : 30%

- ② 공청회에서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, 제도적 보완 수단이 있고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함(3건)

< 개정내용 >

-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%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49%까지로 완화함(제4조제8항)
-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%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(제4조제7항제5호)
- 디지털 전환율 50% 도달 시까지 SO는 개별PP에게 전체 아날로그 채널 수의 20% 이내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제5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)

※ 개별PP : 공공·공익·종교, 지상파계열, MSP, 종편·보도·홈쇼핑계열PP를 제외한 등록 PP

< 개정사유 >

- (PP 매출액규제) 시청점유율 규제 등 보완 수단이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나, 이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우선 완화하는 것임
- (위성사업자간 소유규제)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보완수단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임
- (개별PP 보호조항) 지상파계열 PP(20%) 및 MSP(35%)에 대한 채널임대 제한 규정이 일몰됨('11.1.1)에 따라 중소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임

③ 기타 수신료 납부절차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

< 개정내용 >

- 수신료 면제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'수신료면제신청서'를 삭제하고, 수신료 선납 시 '일시에 납부하는 수신료'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토록 함(제44조제2항, 제45조제2항 신설)

< 개정사유 >

- 별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없이 전화·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, 감액 기준 미비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

○ 추진 일정

- 부처협의·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. 2월
- 위원회 의결 : '12. 3월
- 법제처 심사 : '12. 4월
- 차관·국무회의 : '12. 5월

라.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(안)에 관한 사항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(공정한 경쟁환경 조성)에 따라 방송분야의 경쟁·규제 정책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「'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」를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평가결과 주요내용

① 가입자 확보 시장

㉠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시장

- 방송구역 별로 SO 가입자 점유율이 50%를 초과하는 구역이 전체 77개 중 66개('09년 70개), SO의 전국 점유율은 72.8%이며, 진입장벽(허가)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압력도 낮아 경쟁제한성이 있는 시장임

- 그러나, 위성 및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('08년 13.3%→'09년 21.7%→'10년 27.2%)하고, 요금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쟁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

㉠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시장

- 방송구역 별로 KT(위성+IPTV) 가입자 점유율이 1위인 곳이 전체 77개 중 49개('09년 46개), KT의 전국 점유율은 47.3%이며, 권역제한으로 인해 SO 간 합병을 통한 시장 확대도 어려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시장임
- 그러나, 선두 사업자인 KT의 가입자 점유율이 하락('09년 50.3%→'10년 47.3%)하고, KT와 SO 모두 가격경쟁 여력이 있어 결합상품 등으로 인해 촉발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여지가 있음

② 방송채널 거래 시장

㉠ 지상파방송 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

- 공급(지상파방송) 측면에서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고(HHI 10,000), 지상파방송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신규 채널의 시장 진입도 어려움
- 수요(유료방송플랫폼) 측면에서도 가입자 점유율 기준 HHI가 '09년 6,016에 비해 '10년 5,359로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수요 집중도가 높음
- ⇒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음

㉡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

- 공급(PP) 측면에서 PP의 수신료 수익 기준 HHI가 1,109 수준으로 낮으며,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낮음
- 영화채널 시장에서 1위 사업자(CJ)의 시청 점유율이 83.2%, 스포츠채널 시장에서 상위 3대(지상파방송 3사 계열 PP)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94.1%로, 공급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음
- 수요(유료방송플랫폼) 측면에서는 유료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에서의 집중도가 높아(가입자 점유율 기준 HHI 5,359),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은 편임

③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

㉠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 시장

- 상위 3대 외주제작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13.6% 수준이며 진입 장벽이 낮아, 공급(외주제작사) 측면의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

- 한편, 일반 PP의 외주제작 수요가 크게 증가('10년 총 외주제작비 1,061억원으로 '09년 대비 96% 증가)하였으나 여전히 지상파방송 3사의 수요 점유율이 매우 높아(75%), 수요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높은 편임

㉠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

-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지상파방송 3사에 의해 공급되고,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, 공급(지상파방송사)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됨
- 한편,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2차 유통시장에서 상위 3대 비지상파 계열 PP의 수요 점유율은 20.9%임

④ 방송광고 시장

㉡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

-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은 광고매출액 점유율 기준 HHI가 3,410으로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며, 네트워크 외 콘텐츠 생성을 위한 자본력도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
- 그러나, 현실적으로는 KOBACO의 광고 독점판매로 인해 공급(지상파방송 3사)과 수요(광고주) 양측 모두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음

㉢ 전체 방송광고 시장

- 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에서의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지배력이 전체 방송광고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, 공급 측면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음

㉣ 기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2. 3(금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35)